

“완전한 비핵화까지 마음 놔선 안돼”

문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

“아직은 잠정적 평화 남북 군사 적대행위 중지 국민, 평화시작 피부 체감 국방개혁 망설임 없이 국민 납득가능 개혁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직은 잠정적 평화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 해야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며 “2019년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가는 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상황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며 “남과 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사법적 GP철수와 JSA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 DMZ의 오슬길에서 남과 북의 장병이 손을 잡았다”며 “화살머리 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승평도 열렸다”고 변화상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한반도의 평화 시작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육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야 한다. 국방개혁이 망설임이 있어선 안된다”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 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

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며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사회가 안정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강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군 인권보호과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군장병은 우리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軍, 내년 8월 전작권 전환 1단계 연합검증... 군 구조도 개편

우리 군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작권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연합검증(IOC)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전작권 전환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절차를 밟는다.

군은 변화한 안보환경에 발맞춰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연내 완성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을 유지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

리 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내년 8월 최초 시행하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검증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 최초 작전응용능력(IOC) 검증을 의미한다.

이어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군

구조를 개편한다.

각군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육군은 내년 1월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화력여단이 증설하는 대신 기계화보병사단인 20사단은 해체한다.

해군은 특수전전대에 상륙작전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선견작전대대를 창설하고, 해병대 1사단 예하 3개 해병연대는 여단급으로 증편된다. 공군은 한반도 전역을 위성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한다. /뉴시스

홍영표 “유치원3법,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유치원3법’과 관련해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처리를 지연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열리지 않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꼭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는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오늘 합의가 안되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한국당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3법 논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차질없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뉴시스

‘역사왜곡 금지’ 독일처럼

박광온 의원, 일제 강점기 일본군 성노예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일제 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연계해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 유통도 금지시켰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했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서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를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삭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650억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시스

‘김성태 권력형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민주평화당은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완전범죄를 꿈꾸던 국회의원 김성태 딸의 특혜채용 의혹은 결국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KT는 그의 전 직장이기도 하다. 빼도 박도 못하는 고용세습이자 권력형 채용비리의 몸통 그 자체”라며 “이쯤 되면 단순히 국회의원 도덕성을 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